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 - 政治

# 北韓의 統一戰略

研究執筆責任 金 洪 喆

(略歷) 仁宣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 卒業 (1957)

仁宣大學校 大學院 卒業 (1959)

仁宣大學校 文理大 講師 (1960~1974)

韓國外國語大學 教授 (1963~1965)

漢陽大學校 法政大學 教授 (1972年~現在)

韓國軍事問題研究所 所長 (1973年~現在)

漢陽大學校 附設蘇聯問題研究室長 (1976. 10~現在)

刊行責任 金 諄 教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목 차

문제제기 - 서론에 붙여서	1
1. 통일에의 기본적 저해요인 몇가지	3
2. 전후 한반도상황설정과 세계정치	5
(1) 국토분단과 38선획정	5
(2) 분단한반도에의 정치적 조건부여	5
3. 북한의 군사적 기저와 통일정책·전략	9
- 한반도의적상황설정에 의하여	9
(1) 북한적 상황 - 무력통일구현의 군사적 기저	9
(2) 한반도의적 상황여건	14
- 미·소·중공·일의 대한반도군사정책자세를 중심으로 -	14
(㉠)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15
(㉡) 소련의 대북한군사정책	19
(㉢) 중공의 대북한군사정책	22
(㉣) 한반도상황설정에 미치는 일본의 자세	26
4. 결    론	31



## 문제제기 - 서론에 붙여서

본연구는문목적은 북한정권이 그 실천로선으로 취택해온 소위 「무력통일전략」 즉 무력에 의한 재남침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하려는 북한정권의 정치목적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본논문이 고찰하려는 문제의식의 초점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무력통일전략이나 제차의 무력남침은, 한반도문제의 국제정치적 성격과 한반도 주변관계세력 및 북한적 상황설정을 감안할때, 불가능하다는 가정적 대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20여년의 적대관계를 지속해온 남북한간의 상관관계와 같이, 어떤 단절된 상대와의 상대관계에 놓여있는 타일방의 실천의식과 행동방책을 검출해추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겠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직하게 파악하여 상항의 좌표·추이를 논리전개하는 일은 타일방에 대한 아방의 방향감각과 실천양식을 정립하는데 일조가 된다고 믿어진다.

확실히 정치적 이질질서대결의 분단(분리)상태가 통일에로의 원상복귀하려면 물리적 강제조치에 의한 복귀방법과 불연이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원상회복이라는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취택해야 하는 「쇼이스」의 한계가 지극히 단조로운 것이다.

상기 양자중의 택일이 아니면 결국은 원·불원에 관계없이 「현상태의 영속적 유지」로서 자족해야 한다는 결과사항을 상정하게 하는 따름이다. 단약에 이제까지 북한이 취택 시해온 통일작업상의 무력우선주의적인 실천로선이, 제반사정을 감안한 결론으로서,

실현불가능하다는 가정적 전제가 타당하다면 통일과업수행을 지상명제로 삼고 있는 한국은 대내·외적인 상황변이에 적의순응하면서 생존을 위한 대응방책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일은 작금 한국안정보장론의 좌표설정과 새로운 방향감각모색에 있어 이른바 「군사외적 상황전개」 문제가 시론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이유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일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무력통일전략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면, 저간에 부단히 도전해온 소규모무력도발상에 대하여도 즉흥적인 판단만으로 대처할수 없는 어떤 면밀한 검토분석을 요하는 문제사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겠다. 다시말하면 소규모의 무력도발을 대 규모의 것으로 결코 확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소규모 무력도발행위를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정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용해왔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가령 저 1·21사태는 그 전형적인 호예라 할수 있고 최근의 해군방송선피남사건도 전자와 동류라고 예거될수 있겠다.

이렇듯 북한의 통일전략은 무력통일전략이든 아니면 평화통일전략이든 능히 다목적적저점은 주의깊게 관심갖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비록 무력통일전략의 실현불가능성이 여실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만에 머무르지 않으며, 요컨대 무력통일전략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로 기인하여 파생될지도 모를 상황전개에 역�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가를 구명해보는 일은 한국민의 중책의 일단이 아닐수 없다. 통일을 위하여는 만약에 북한의 무력통일전략이

불가능하다는 제반여건이 판명된다면 한국의 대응책 또한 「군사의적」인 측면의 중시를 요청하는 논리세계가 펼쳐질 것도 긴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목적은 문제제기된 「가정」(무력통일전략가능성)을 논증하는데 있고, 이를 위하여 몇가지의 예비적 고찰과 북한통일전략의 기본성격을 파악구명하는 집약적 방법을 취하였다.

### 1. 통일에의 기본적저해요인 몇가지

한반도한국민은 해방독립후의 전국사와 더불어 20여년을 긴장과 갈등의 세계속에 살아왔다.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민족전쟁의 치참한 비극을 체험했고, 인하여 「미래올르기」상의 동족간 적대감정은 가일층의 고조를 제태하였으며, 국제정치상의 조건부여는 한반도긴장상태의 명확적 현상타파보다는 차라리 「현상유지」책으로 일관해오는 가운데 남북한의 군사적 경쟁상태는 군사법칙상의 「양극화현상 (principles of polarity = karl v. Clausewitz)」속에 추락하고 말았다. 국민사적인 원시감정상의 통일염원계 관계없이 정치현실은 통일의 조기구현희망보다는 통일의 장구화를 못박아 온 셈이다. 차등의 상형여건, 사실관계는 모두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간취될 수 있으며 이것들을 집약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는 세계강대국정치상의 전후처리문제의 일환이며 국토분단이 조건부여된 미결분규지역이다.

둘째, 남북한지역에는 각기 정치적 개성을 정립하여 실천하려는 상호이질적인 대립질서의 성숙과정에 놓여있다.

셋째, 인하여 남북한간의 자기관철적인 「주장」과 「단언」의

심층은 상호공약수를 모색할수 있는 「컴뮤니케이션·퀵」이 단속상태에 놓여있다.

넷째 정치질서상의 이질적 대결은 언어감각·일상생활철학 사회정의·정치관념체재의 대결을 낳게되고 따라서 의미권과 생활권의 상호대립상을 심화·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남북한상호불신속의 자기중심주의적 실천노력은 결국 자아정치권의 보전을 위한 물리적 방편인 상대적 군비경쟁을 낳고 있다.

여섯째, 한국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는 자율적 노력을 영도실천해야할 정권사적 책무가 지대한 것인데 당장은 이일을 크게 기대할수 없게 되어있다.

일곱째, 그러면서도 국민사적 염원이나 정권사의 지상명분은 「통일과업수행」에 있는 까닭에 상념과 현실간의 편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2. 전후한반도상황설정과 세계정치

(1) 국토분단과 38선부정: 전승연합국들은 전쟁종결을 위하여 공동노력하였다. 특히 미소영불 등 전승연합국중심세력국가들은 전후처리문제회정의 공동책임국가들이다.

독일문제, 인지반도문제, 한반도문제 등사에 있어서 그러했다. 이들 강대국들의 공동조치결탁에 의하여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38도선을 경계로 양분단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국토가 분단된 가운데 한민족은 여차한 타율적 조건에 의하여 적대관계의 질서형성을 강요받았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문제는 「문제처리」보다는 「문제미결」 내지는 분규지역으로서의 심화를 자초케하는 세계정치상의 풍운아로 만들어 놓았다. 한반도문제상황설정의 주도적 책임국가는 역시 미국과 소련이었거니와, 이들 양대국의 공동국제책임은 한국민의 비상한 관심사의 하나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관계국들이 한반도분할확정에 그 원인조성과 조건부여에 공동책임이 소재하는 것이라면, 현재나 장차에 있어서 한반도문제의 해결과업에도 책임이 중대하다고 간취되는 때문이다. 이는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민의 자율적·독자적 노력은 말할것도 없지만 미소는 공히 직접·간접의 막중한 책임·역무가 부과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분단한반도에의 정치적 조건부여 - 우선 미소의 분할결정정책부터 분단한반도에의 정치적 조건부여는 시원한다. 제 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전세계정치질서는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양극화진영정치체제로 돌입하는 동시에 냉전사의 제국면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정치적·경제·군사·외교상의 계약상도 냉전사·진영정치질서의 변개 과정에 적응준립하면서 20년성년사를 점철하였다.

소련은 1945년 8월 24일, 평양전주점령과 더불어 군정년간에 들어갔으며, 1948년 9월 9일을 기하여 북한지역(38선이북)을 통치하는 공산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 까지 소련점령군사령부는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사회체제에로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정지작업을 통하여 조건부여했다. 소련군은 점령전주시 소련으로 부터 김일성 일파를 대동일복케하여 국내외제과 공산당 정치세력을 정리하고 이들을 김일성 주도권하에 압복케하는 점령정책을 강행하였다. 소련점령당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들 김일성일파는 제과정당조직을 흡수통합하여 오늘의 「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으니(49년 6월), 김일성은 이 노동당의 수장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산당독재체제를 구축하여 통치해 왔다. 물론 통치질서의 존립운용을 저초하는 기본인 헌법은 소련헌법류형에 따른 것이었음은 말할것도 없다. 이로써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산사회주의질서의 제도·문물·사상 등을 북한지역에 도입체택하여 정착시키는 기초작업을 완료한 셈이었으며, 인연하여서는 남한과는 판이한 제도질서의 이질적인 20여년의 성장사를 꾸며온 것이다.

한편 남한지역은 미군의 전주점령지역이 되었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상륙전주개시로 부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영도하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때 까지 미군정년간을 체험 하였으며, 남한지역은 자연히 미국권전영질서에 편속되는 제도질서· 문물·사상수입의 제반 준비작업을 겪게 되었다.

해방된 남한의 경우도 정국의 혼란이 격심한 파동을 거치는 동안 좌·우익제정과·정당세력들은 그러대로 남한단독선거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선거를 통해서 정권수립의 기초를 다졌으며, 미국파에게 승리를 안겨다준 셈이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발전증진시킨다는 기본정신과 국체·정체의 성격을 담은 미국헌법류형을 제정 채택하고 출발하였다. 이로써 남북한은 상호이질적인 대결의 정치 질서가 펼쳐지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실로 갈등과 긴장의 연속에 지새웠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정치명분상으로는 국민사적 염원의 지상명제로서 통일문제는 국경의 전면에서 내세우는 「이슈」였지만, 「정치」라고 하는 본질이 개성적이고 자기관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체제질서의 조화와 융합으로서만 실현가능할 수 있는 통일기운은 실천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명분론상의 당위론을 거증하는데 그치고 말았었다고 이룰수 있겠다. 역으로 남북한의 실천노선은 자기보전을 위한 군사적 경쟁상태로 일관해왔고, 특히 북한의 기본노선은 통일을 위하여는 무력통일만이 우선한다는 좌표설정으로 내외에 명시해온 터이다. 50년의 6·25 한국전쟁도받은 북한의 무력통일우선책을 명증한 표본이라 할수 있다.

과연 북한의 향후의 통일정책·전략도 위와 같은 「무력통일우선론」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논증해보는 일은 본논문

의 연구목적임을 앞에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은 북한  
상항의 군사적 기거면을 고찰하였다.

### 3. 북한의 군사적기저와 통일정책전략

- 한반도의적상함설정에 연하여 -

(i) 북한적상함 —무력통일구현의 군사적 기저— 앞서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이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런데 북한의 정규군대인 「조선인민군」은 정권수립도 되기 7~8개월이나 이전인 1948년 2월 8일이었다는 점은 크게 주목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정권의 성격이 그 출발부터 강력한 군사주의적 실천로선의 정립을 꾀했었다는 사실로서 간취되는 때문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쟁을 야기한 「무력남침」으로 여설히 증명될 한 셈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인민군조직은 당군체제를 취택함에서도 모든 문제는 집약된다. 「인민군」은 당의 군대이며 당은 김일성의 독재적 지도체제를 보위하는 존재일뿐 아니라 당의 혁명무장력을 「인민군」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의 실천규약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노동당은 남북조선의 인민대중을, - 단결시키며... 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남반부를 미국제국주의침략자들의 독점과-반동정치로 부터 해방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인민군」을 혁명무장력으로서 투입할수 있게끔 창군한 것이었다. 「조선인민군」의 전군정신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활동시기의 무력투쟁전통을 전면에 내세워 김일성의 신격화로 집약된다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적어도 구호로

는 「평화통일」을 주창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무력통일」을 위주로 해온 것이 통일전략의 전통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쟁이 시도되었지만 결국은 실패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 엄청난 군비를 강화하여 부단한 대남도발의 전략전개를 꾀해온 것이다.

그러나 무력통일정책 및 그 전략전개를 명실공히 모색실천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잠을 수 있다. 대체로 한국전쟁이 휴전된 1960년까지는 전후복구경제계획 및 전쟁으로 황폐화된 기간산업의 재건을 위한 정지작업을 수행한데 이어 1960년대 후반은 군비강화와 경제건설계획을 병행추진하였던 것인데, 이 동안의 국제정세는 커다란 기복을 겪게 되는데, 특히, 북한의 경우에서 보면, 세계정치는 소위 「다원화」양상을 띄게 되고 인하여 거시적으로는 「이태올로기」의 둔화현상이 채택되는 한편, 중소 이념분쟁의 격화단계에 접어든 동안이었다. 냉전사의 추이속에 미소의 세계전략은 「공존」태세경비의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바탕에 있어 전쟁개념은 가일층 제한전쟁양식에의 효용율을 높이는 현상이 지배되어 갔다.

바로 중소이념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같은 공산권내의 지도권 때문에 있어 세력균형상의 등차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밖의 정책자세수정의 중대한 기로에 임박케 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화와 갈등의 혼란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그래서 한국전쟁당시의 직접적 은인이었던 중기에 대하여 김일성은 그 내내적 욕구-무력통일을 위한 기초작업 즉 군비증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득불 대소의존을 높이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에

1967년에 계획완료예정이었던 7개년경제계획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라는 병진정책이 경제건설상의 차질이 생기고 국방력강화면에도 불여의한 결과를 노정하게 되자 드디어 1966년에 이르러서는 중대한 정책수정을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실 무력우선주의적인 통일정책에의 기초를 일증 굳히는 실질적 제7개년간의 출발로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가령 1966년 10월의 「조선노동당전국대표자대회」에서 천명한 실천요강은 이후의 통일정책전략전개의 기본자세를 조건부여한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1965년 5월에 천명한 이른바 「자주로선」 선언은 「사상의 주체」,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국방적 자위」를 표방제창한 것이었으니, 이는 중소분쟁격화의 틈바구니에서 중·소 어느쪽에도 말려들지 않으며 편들지 않는다는 대외명분상의 외교자세를 내세운 것이었고, 실제내용면에서는 대소의존도를 높이는 예비자세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력통일을 위한 경지작업으로서의 군비증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물량적·기술적인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보장받아야할 국제「파트너」가 필요불가결한 때문이었으며, 이 경우 중공보다 소련이 유리한 방조자로 적격이었던 까닭이다. 이와같은 상황조건하에서 개최된 전기 「노동당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소위 「4대군사로선」을 채택 결의하여 그 실천을 도모하면서 작금에 이르렀다.

그실 이 회의에서 채택결정된 사항은 북한이 이후의 군사주의로선을 강화하고, 적어도 주장으로서 일관성을 유지해온 종래의 평화통일론에서 무력통일론으로 실천하려는 대전환점을 마련한 계기이

기도 하였다. 즉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군의 간부화 및 근대화라는 4대군사로선을 내세워 실천적 강경로선을 정책실시의 전면에 도출시킨 것이었다.

이 「4대군사로선」의 기본성격을 말해주는 것은 다음의 표현에서 단적인 설명이 요약될 것이다. 즉「...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철벽같이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점이었다.

그래서 상기 당대회는 1967년에 종결예정이었던 7개년경제계획을 3개년연장조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이유로서는 소위 「인민경제」의 일부제약이 있더라도 국방력강화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있음을 들었던 것이다. 위와같은 조치는 확실히 국방경제건설의 국시적병적책때문에 양자의 성과상의 차질이 생긴 때문이요 계획연장조치된 3개년간은 전적으로 국방력강화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백히 했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이후 북한세출총액에 대한 국방·군비비의 투입비는 휴전년도인 1953년의 15.2%를 제외하고는, 이후의 대체추세를 보면, 1963년까지를 종잡아 볼때 56년도의 5.9%에서 63년도의 1.9%라는 감소비를 나타내고 있지만, 1964년부터는 4.3%로 급증하던니 1967년부터는 무려 30%를 상회하는 급증율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는 확실히 그들의 자주국방·군비비라는 것이 얼마나 고가의 막중한 부담인가를 보여주는 명증이겠거니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민부담은 실로 막대한 자기출혈을 쉽사리 상정할수 있는 것이며, 이 일의 강력한 실사와 자기합리화 내지는



자기정당화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위기의식조장과 무력주의의 정당성을 펴는 가운데 북한지역전체의 국민의식구조를 호전적 유형으로 변질강제조작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평화적 국토통일을 사실상 불가능케하는 조건부여를 강행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일은 비록, 위와같은 무력주의우선의 실증적 도전양상이 저 1968년 1월의 「푸에블로」호 피납사건 및 1969년 4월의 EC121 미정찰기격추사건 등을 통해서 적극적 도전자세가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김일성의 무모한 무력우선실천론이 미소를 위시한 국제정치상의 조건부여때문에 불확대내지는 좌절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일 것이며, 차등 사건이후는 북한이 대소관계 및 대중공관계개선조정 등 외교적 자세전변의 징후가 현저하게 노출되어 왔을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국의 보도에 보는 바와같이 1960년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가령 1만 2천자선언을 통한 남북한의 상호병력감축, 불가침조약체결, 남북한간의 상이한 현존체제를 현상대로 용인하는 연합체구성을 제의하는 등의 정책태도표명은 적어도 표천공세로서는 남북통일에의 무력우선론을 과기한 실천세력의 방향감각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김일성의 평화공세가 실천적 노력구현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액런 그대로를 받아드리기에는 허다한 경계와 의문점이 없을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확실히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아도 전쟁정책우선론을 펴기 위한 국내적인 준비증강 재정부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출혈이 막심하고, 그뿐 아니라 무력도전으로 기인될지도 모를 전쟁상태의 확대현상은 북한이 휴전후 오늘까지 육성구축해 왔다고 주장되는 산업시설등이 일시에 초토·폐허화될 결과사함을 감안계산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이 사실이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정책·전략전개」를 기절제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판단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라.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겠거니와, 한반도주위관계국가의 기본자세가 무력주의보다는 차라리 비군사적인 방법과 불확대원칙에 입각해서 세계문제일반 및 한반도문제를 포함한 분규지역·긴장상태 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배려한다는 세기적 추이가. 그실 김일성의 모험적인 무력통일정책자세를 억제하는 중요한 외적요인으로 감안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북한의 전기한바와 같은 평화통일공세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정립을 안팎에서 요청해올때 대한 예비적 대책마련을 어떤 방향에서 좌표설정해야 하느냐의 중대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 상기되는 터이다.

다음은 상기와 같은 북한의 대내적상항과악에 대한 한반도외적상항과악을 통해서 북한의 「무력통일정책전략전개불가능성」에 조건부여하는 일측면을 검증해볼 것이다. 그 대상국가는 한반도분할에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지대한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자세를 구명하고, 한반도의 운명전개에 크게 영향을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중공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좌표를 중심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2) 한반도외적 상항여건 미국·소련·중공 및 일본의 대한반도군

사정적자세를 중심으로

(7)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1949년 10월 중국대륙이 모택동의 공산정권에 의해서 석권되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건너가 정권을 유지하게 되자 이는 「두개의 중국」이 존립하게 되었으니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은 대소련전략수행에 걸쳐진 대중공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책임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때에 즈음하여 1950년초 당시 미국무장관이든 「애치슨」에 의한 극동방위선언은 한반도와 대만이 해방위권밖의 대상지역임이 시사발표되었던 것이다. 전후 미국은 모택동이 집권할때까지 중국대륙에 장개석정권을 존립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지불하였음에 불구하고 결국 대중국대륙정책에 실패하였고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도 남한에 비교한다면 소련의 양육에 의하여 강력한 군사실력을 구축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남한의 안전보장책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1949년 6월말까지 단행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사실상 남북한으로 대립된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상태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바로 1950년의 한국전쟁은 미국의 북태평양전략수행에 있어서 지대한 하나의 중대한 시련이었다. 한국의 방위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입장이었던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였으며 한국의 16개 우방제국이 참전함으로써 UN의 이름을 빌려 수행된 국제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군원장비보급과 한국의 인적병력자원으로 수행되었으며, 병참, 군수후방기지 역할을 일본이 담당하였었다. 전쟁의 결과는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상의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 사태전개를 재래하였고 한반도의 내적 토착상황을 남북한의 대립상은 가일층 화해하기 어려운 적대관계의 심화와 민족분열의 고착화를 재래한 것이었다. 즉 -

첫째, 소련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대북한원조의 적극화를 촉구하였고.

둘째, 중공-북한간의 정치적·군사적 유대관계를 증진하였으며

셋째, 한일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정상화 및 협조체제의 확립을 촉진하였으며.

넷째 미국의 북태평양전략상 한미관계·한일관계·미일관계조정은 결국 국·정치·경제·군사상의 한·미·일 3국관계의 밀착과 통합전략개념의 공동실천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다섯째, 북한의 전쟁정책중점주의실시로 파생된 대남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측의 자기방위를 위하는 현실적 요청때문에 엄청난 병력유지를 위시한 제반 군사적 경쟁상태를 상대적으로 자극하는 진폭의 확대결과를 재래한 것이었다.

물론 위와 같은 남북한의 군사적 경쟁은 주로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경쟁을 의미하는 전제적결과사항이라고 이를 말하다,

이 모든 사태가 그실은 미국과 소련의 대세계전략실천구상에서 얻 유된 것이며 한반도에의 군사적 조건부여에서 재래된 것임을 인식하게 마련이다. 특히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통은 「정치적」인 보루기 지로서 보다 차라리 「군사적」인 작전기로서 간취해왔음을 감안할 때 항간의 방대한 군원에도 불구하고 그 거계액은 한국군현대화의

기본과제라 할 병력·장비·무기체계일반의 질량향상·증강에 보다는 병력유지·운영관리비에 충당되는 것이었으니 차는 오랜동안 한미간의 이해결문제로 존재해왔거니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의 전통은 미국의 일방적 편의에 따른 대세계정책전략태세의 전환에 연해서 수정·개변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이 일은 특히 작금년간의 정책방향변동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가령 대소진장, 완화, 대중공정책조정, 대일중시정책등을 비롯해서, 월남전의 종결, 「닉슨·닥트린」의 구체화같은 것을 들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세계정책, 전략상의 「정치적」 배려요청이 가일층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대한정책상의 「군사적」 측면을 절제하고 대국적인 세계정치적, 전략적 요청사항에 한국의 군사적 조건을 증속시킬려는 미국의 정책구현대세 경비방향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 터이다.

지금 미국의 대한군원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휴전후 1958년도의 3억3천여만불을 절점으로 이후년간은 대체로 년평균 1억4~5천만불선으로 떨어져왔다. 무엇보다도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북대평양전략권내의 정치적, 전략적, 병참산업후방기지로서의 성장시켜왔거니와 강차의 한일관계의 추이를 고려할때 「한일간의 경쟁적 대립상항(rivalry)에 있어, 일본을 한국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시키기에는 열강(Great Power)의 세계전략을 위하여 일본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표현같은 것은 한미일 3각관계의 총체적 투영을 특히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통을 저절히 개변하는 것으로서 간취하여 잘못이 없을 것이다.

작금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한미간에 설왕설래 시비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정책당로자들의 정책발언이 구체적인 선까지 눈급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주한미군의 병력규모는 2개사단이다. 한국전쟁휴전이래 깨두듯하게 될 주한미군의 존재역할은 따지고 보면 「UN군」이라는 이름을 빌려 한국역내에서의 작전지휘권을 통합보유함으로써 사실상 한국군의 「독자적」 전략개념확립실천은 전제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대규모재남침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겠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북한의 통일정책기본로선이 무력주의우선정책을 취택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유지를 위한 「밸런스」(balance)로서의 상징적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철수」 그 자체의 시비라기 보다는 차라리 철수전후에 마련되어야 할 장치 한국통일과업수행에의 초석이 되고 당장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미소공동의 「국제적」 책임감을 발동하여 남북한간의 상호, 균형책과 한반도안정 및 안전을 위한 정치적, 외교적인 명백한 과제가 설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함을 강조하는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위와 같은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전대책마련이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 결과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절단된 대결의 긴장상태를 비군사적방법에 의하여 완화, 해소하는 서상의 근본대책이 없이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진다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국의 통일문제는 절망심난해질 것이고 한반도, 한국민의 비극을 가중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고로 주한미군의 철수정책구현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반도분단책임에  
 깊이 관여된 만큼의 「한반도문제해결」(통일)을 위한 충분하고도  
 만족스럽만한 기초작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1948년 10월 8일, 이승만대통령이 미군의 철수연  
 기를 요구하는 주장에서 ".....남·북의 분열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오 미·소양국이 행한 것이며 그 책임을 전 미국에서 이 문  
 제를 해결하고 철폐해야 될 것이며 또한 북한에는 20만의 공산  
 군이 조직되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에는 미군이 앞서 우리의 군대  
 조직을 허가하지 않은 관계로.....치안을 유지할수 있는 상당한 국  
 방군이 조직된 후에 철폐하라는 것이니 이것도 미국의 책임일 것  
 이다」라고 표현내용의 전체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작금의 주한미  
 군철수론의 시비에 붙여서도 똑같이 적용될수 있을 것이다.

(4) 소련의 대북한군사정책 -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을 야기할때  
 까지의 북한의 군사실력을 육성강화한 것은 소련이었다. 또 국제  
 정치이론이나 혁명정치질서의 통예적 「메카니즘」으로 보아, 북한  
 이 무력남침으로 한국전쟁을 야기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소련의  
 양해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며 소련의 지원없이는 도저히 모험을  
 시도하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결국 한국전쟁의 전세가 북한측에 불리하게 역전하자 휴전을 계기  
 한 것도 바로 소련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한국전쟁에의 실질적  
 군사개입은 하지 않는 가운데 시종렸던 것이다. 소련위 입장에서  
 보면 전쟁수행과정을 통해서 중공이 군사적개입을 단행함으로써 달미  
 암아 북한과 중공은 전투실력에 의한 정착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요, 한편으로는 중공이 그 정권수립후 처음으로 중국대륙밖에서 UN군이라는 국제무장력과 대결한 계기마련이 되었으며 휴전과 더불어 국제분쟁해결교섭에 중공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소양극화진영정치질서에서 이제까지 소련은 공산진영의 경상으로서 김일성과 모택동의 성장을 위하여 절대권을 행사할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중공은 한국전쟁을 통한 전투실력의 과시와 더불어 국제무대에서의 독자적 발언권의 확대현상을 초래하는 최초의 인연이 한국전쟁수행의 결과였다고 볼수 있다.

1954년의 「제네바」 회의, 판문점의 휴전회담정전위원회에 중공이 당당한 대표자격으로서 관여하게 된 것은 그 호예라 할수있다. 정일보하여 1950년대 후반기부터 대체로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중소이념분쟁」 시기에 접어들자 차츰 소련과 중공은 공산권진영내에서의 지도권쟁탈문제가 노출되고 인하여 중소관계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국경분쟁, 월남전쟁 등등을 둘러싸고 관계동결을 지속해왔다.

소련은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위와 같은 중소관계의 추이등에서 파생되는 대한반도 특히 북한김일성에 대한 영향권확보를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전후북구경제년건을 통하여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현대화과업수행을 위하여 소련이 북한에 지불한 경제원조는 그실 북한으로 하여금, 일시 중공을 의뢰하고서라도, 소련에 대한 정치적인 우충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는 결과를 재래하였으며 확실히 소련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지배하던 그만큼의 정치적, 군사적충



속성이 증대하는 것이겠다. 1954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6억 3천 5백만불상당의 원조를 약속했고 1968년말까지 5억 8천여만불을 실제로 원조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터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전후복구를 위하여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2억 5천만불의 무상원조를 약속하였거니와, 차산의 원조배경을 통하여 북한은 전후경제복구는 복구이지만 제철소 및 공장, 발전소, 비료공장, 제련소, 세멘트공장등々 일반산업은 물론, 기간군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작업을 충분히 배려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경계건설, 한편으로는 무장력증강 및 근대화를 표방한 북한을 위하여 비록 중소분쟁이 격화된 화중에서도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 경제원조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1961년 7월에 북한-소련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원조조약」을 차후에 전개되는 북한의 이른바 군근대화, 간부화정책을 보필해주는 근간이 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군사목적상의 원조정책은 소련의 세계정책과 세계전략을 실시하는 기본구상·방책의 테두리 안에서 조건부여되고 상향설정 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소련의 동전략실시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련의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북한의 군비정책의 「스마일」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다. 무릇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를 받는 군소국가들은 모두 수원조건과 무기장비채계의 비독자성때문에 언제나 독립적인 전략개념구축수행에 많은 제약울 받는 것이거니와, 북한의 경우도 그 예외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소련의 세계전략실시는 언제나 미국과의 상대적 균형을 모색하면서 태세정비에 왔다. 소련의 세계전략개념이 공존이론을 표방하면서 소위 「강장완화」라는 데에 중점두고 있음은 수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기초전략 내지는 기본정책에 연해서 개별정책과 방법을 실시운동하는 때문에 적어도 이 「기초전략」이나 「기본정책」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또는 무력적이든지 아니면 평화적(외교적)으로 압력과 제약과 응징을 가하는 것이 항간의 사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소련이 취한바 있는 북한에 대하여도 예외일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처 1968년 4월의 「푸에블로」호 피납사건 및 1969년 1월의 EC121 미정찰기 격추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소련이 취한 대북한태도 등은 그 호예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련은 대북한군사정책에 있어서 대미관계·대일관계 및 대중공관계가 개재하는 까닭에 여차한 관계조정을 감안하면서 정책 실시하는 것이며, 앞에 거시한 「기초전략」에 응종하여 정책조절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북한이 감히 한반도에서 「무력동일정책」의 전략전개를 불가능케하는 조건부여의 지도적 입장에 있다는 사실이다.

(註) 중공의 대북한군사정책 한국전쟁발발당시만 하더라도 중공-소련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양국화전명정치진석하의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권전명의 결속은 소련-중공-북한의 공동전선의 형성을 가능케하는 상황이었다. 중공으로 보면 모택동혁명도선의 확립과 혁명무장력수단으로서의 중공인민해방군의 「근대화」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도 소련으로 부터의 제반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국면에 있었던 것이 대체로 1950년대초기에서 1958년경까지의 형편이었다.

중공이 개입한 것은 1950년 10월이었는데 이때의 전국은 UN군이 북한전역을 군사적으로 석권한 때였고 보면 김일성정권은 동진 등화의 운명에 직면한 난국이었음을 감안할때, 중공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시혜는 양자간의 공동운명체적 유대감을 명증한 계기였다 할수 있고, 이후의 중공이 북한에 대하여 확보한 정치적 영향력과 공동진전 및 유대우호의 기저를 담보해놓은 결정적인 수단이었다고 볼수 있겠다. 비록 중소이념분쟁년간의 미묘한 중공-소련-북한의 3각관계와 중공의 문화혁명이라는 정황을 통해서 중공-북한관계가 일시는 상호소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작금년간의 중공-북한접근주의는 양자관계가 정치·경제·지리·역사상의 장구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 까닭에 장차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한반도문제의 상황변화에 투영될 중공의 관여도가 점증하리라는 관계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물론 UN군이 북한전역을 군사적으로 석권하였을 때는 중공으로 보면 그 주요산업기지도 전략기지인 동북지방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취하였을 것인즉, 소련의 대북한태도와 같이 우회, 간접적 일수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중공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투실력에 의한 직접적 지원만이 「외세두장력(UN군)에 의한 중국대륙에의 직접적 위협」을 미리 제거할수 있는 실행행사라고 간주하고 군사개입을 단행했을 것이겠다. 과거 백여년간의 중국

대륙역사가 일본 및 서양열강의 침략에 의하여 쓰러린 체험을 되  
 푸리 해왔다는 비운의 기록에 대하여는 바단 「이베올로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도 중국대륙의 지배자라면 누구라도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자아보전의 필사의 노력을 경주했을 것인즉,  
 여차한 19세기이후의 중국대륙의 역사배경은, 장구한 시일을 두고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및 군사적 상항진개의 밑바닥에 깔려 있  
 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공과의 국제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시도하  
 는 제국들은 이 문제를 깊이 통찰하면서 상항처리해나가야 할 것  
 이다.

한반도긴장상태의 기본성격을 검증하는 마당에 있어서 항간에 취  
 택해온 북한김일성의 부단한 도전적인 군사주의로선을 제외한다면,  
 중공이 한국전쟁당시에 군사개입한 결과사항에 대해서 한두가지 유  
 념할 일이 있는 것이다. 즉 중공이 군사적 개입을 단행함으로써  
 서상한바와 같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여러가지 실리를 얻었  
 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의 포로중의 상당수가 자유의사결정에 의하여  
 대만국민정부에로의 송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푸로파잔다」전에  
 서 보면 중공의 국제위신에 상당한 손상을 제대한 사단이었고 상  
 대적으로 대만국민정부의 국제적존재, 입장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  
 켜주는 결과가 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한국지역과 더불어  
 1950년초의 소위 「애치슨」선언에 의해서 미국의 극동방위권으로  
 부터 제외되었는 것인데 중공의 한국전개입은 곧 미국제7함대의  
 대만해협부입을 초래케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대만을 미국의 대중공  
 전략의 전진기지로써 강화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고 대만을 중국대

목으로 부터 더욱 철저하게 단절시켜버리는 결과물 초래케 하는 것이었음을 들수 있을 것이다. 또 UN으로 부터는 「침략자」의 낙인을 받게되고, 대만의 국제적 활동진폭을 증대해주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결과이었으며, 반면 중공은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가 일층 고립과 소외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 일들이 모두 결과적 으로는 「두개의 중국」의 「이베저」를 전세계에 길이 심어주는 계기조성이었다고 간취될만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문제의 변이는 곧 통일문제라도 직결되는 것이거니와, 중공이 한국전쟁에 직접군사개입함으로써 말미암아 서상한바와 같이 중공의 국제사회무대에서의 정상적 복구를 지연시키는 결과사항이었다고 간주할때, 장차는 중공이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태 발전에 대응하는 정책배려를 해야할 경우, 군사적 측면에서 보 다는 고도의 외교적, 정치적 협조와 압력과 평화적 개입을 더욱 중요시하지 않을수 없는 중한 체험을 한국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핵보유국이 라는 엄청난 군사실력상의 표준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역량이 증 진되어 갈수록 상대적인 정치적, 외교적 발언권을 강력히 원용할 것이 예상되는 문제이겠다.

다만 중공의 대북한군사정책기저는 1961년 7월에 중공-북한간 에 체결된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라는 방위협력체제에 두고 있는 것이거니와, 이는 적어도 명문상으로는, 같은 해에 소련 과 북한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원조조약과 더불어, 중소는 공히 북한의 안전보장책을 공동조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들은

모두 한국의 안전을 사실상 집단보장하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 및 한미일관계와의 상관관형관계에서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공의 입장에서 보아도 북한의 모험적인 무력통일정책의 전략전개를 독주시키는 일은 위험천만한 것으로 간취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공은 공산진영의 주도권쟁탈을 위하여 소련과 자웅을 겨루는 판국에 있는 때문에 국제사회·세계정치무대에의 복구가 현실적 요청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대미관계, 대일관계의 제조정을 위시하여 캐나다등 자유진영에의 외교적 진출을 도모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만약에 북한이 중공의 기본이해관계사항을 도외시하고 한반도문제해결에의 무력주의적 독주를 간행할때, 김일성의 무력통일정책을 지원하거나 묵계하리라고는 도저히 상황판단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대륙은 사실상 「두개의 중국」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것인데, 적어도 향후 상당기간동안 중국대륙문제도 「현상태의 지속적 고착상태」를 상정할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공의 대북한정책도 김일성의 군사주의적 모험을 격리하는 일보다는 차라티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위해서 더욱 관심갖게 될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김일성의 무력남침은 중공-북한관계의 측면에서 검증한다 해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굳게 밀발결하는 것이겠다.

(라) 한반도상황설정에 미치는 일본의 자세 - 일본은 미국의 북태평양전략실시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미국의 대한정책수행상의 중간「보

스」 역할을 해온 것이 종전 이후, 특히 한국전쟁이후의 지배적인 존재 역할이었다. 1970년 6월을 기해서는 소위 미일안보조약이, 자동연장됨에 따라 장차 「아시아」 정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발언권은 가일층 증대될 요건이 굳혀지는 셈이다.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기본입장은 그 대미·대소·대중공정책실시의 부차적인 대상으로 간취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이나 소련 및 중공의 대한반도정책추이에 적응해서 자기조절하는 입장으로 이해될수 있다. 고로 일본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은 미소가 중심해서 전개하는 세계전략에 순응하는 한편 개별정책으로는 대남정책과 대북한정책을 따로따로 차원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는 그것대로 유지하면서도 북한과는 비공식적이거나 민간 「베이스」를 통해서 관계유지의 「찬별」을 배려하고 있는 터이다. 이는 장차 일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북한과도 관계정상화를 구현할 것이라는 상정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반도 긴장상태의 「현상 유지」를 위하여 미·소전략전개와 동조하면서 현실방책으로는 우선 「두개의 한국」을 전제로한 정책실시의 「스타일」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대한반도 정책태도는 일본이 취택·시도해온 대소정책 대중공정책에 연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대미정책의 상향변이에 쫓아서 대한정책을 조정해왔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미일안보체제의 순조로운 재조정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동북아시아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발언권증대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 일은 그실 미국의 실질적인 양해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일본의 대중공정책 및 대소정책실시에 있어서 일본독자적 정책제량권의 한계가 종전보다 일층 확대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현집권당인 자민당정권은 대중공정근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하여 장차 중공의 UN가입문제 및 중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표권문제등을 둘러싸고 투신될 일본의 정책태도는 사실상 「두개의 중국」을 전제로 하는 선에서 상향처리될 가능성을 크게 예기할수 있는 추세에 놓여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정국전개에 있어서 「두개의 중국」화가 상당기간동안 고착되는 경우에는 한반도문제처리의 「패턴」에도 중대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중공정근책은 언제나 주목을 모으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대소정책이 또한 기본적으로 미소의 세계긴장완화정책에 등조하면서 현실적응하는 것이다. 「시베리아」개발 등 대소 자본투자 및 수출시장개척확대를 위한 실리추구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실리정책추구의 결과사황은 바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보는 일본의 기본입장에도 반사되는 것이며 한반도문제처리의 방향설정에도 크게 영향주는 것으로 간취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책」에 중점두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긴장상태의 「현상유지책」에 정책반영될뿐 아니라 이러한 기본자세는 북한에 대하여도 그 「무력통일정책」의 전략진행을 불가능케하는 간접적인 조건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황간에 있었던 미일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



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표명한 다음 「중공이 그 대외관계에 있어서 보다 협조적이며 또 건설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표현의 구절은 장차 미일양국이 동북「아시아」문제 처리에 임하게될 기본자세정립상의 공동관심이 반영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자체의 방위력정비계획을 실시해오는데 동안 명실공히 「자주방위론」의 독자적 능력기저를 구축해왔다. 1976년도에 종결될 제 4차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는 재래식군비수준에 있어서나 핵보유능력년에 있어서나 중공에 다음가는 실력국가로 행세하게 될것이 약속되었다고 이룰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동북「아시아」문제처리에 임하는 시대감각을 어떠한 측면에서 중점고려하느냐에 있는 것인데, 작금에 공지되고 있는 일본의 소위 「국방기본방침」의 기본방향은 「국방은 어디까지나 외교문제와 포리일체이어야 하며 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최대한계선을 고수하는데 유의」하고 다양적인 국제정세를 충분히 감안검토하여 50년대의 냉전사상적 배경관점을 탈피한 국제태세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까닭에, 비록 북한의 김일성이 「무력통일정책」의 실천적 모험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의 현긴장상태가 폭발적인 국면으로 전개될 것을 바라지도 않을뿐 아니라 설혹 폭발된다 하더라도 한반도내의 작전개념이 확대되는 것을 적극 제한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석되는 것이다.

어우기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당돌하고도 모험적인 도전을 견제하

는 한국의 대북한안전보장조치는 한미관계 - 한일관계 - 미일관계 - 한미  
일 3각관계등의 상호밀착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 것도 대북한관계  
조치의 중요한 요건임을 인식하는 터이다.

이로써 일본의 대한반도정책태도를 검증해본 결과사항에 따르는  
경우도, 북한의 무력남침통일은 그 가능성이 허박하다는 논리전개  
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 4. 결 론

「과연 북한의 무력통일(남침)정책은 가능한가」라는 것이 본연  
구논문의 전제적 가정이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통일의 기본적인 지해요인 몇가  
지를 거시하고, 한반도상항설정의 세계정치적 조건부여를 약론한  
다음 북한의 무력통일전략 전개의 군사적 기저사항과 아울러 한반  
도외적 상황분석을 시도하였다.

적어도 본연구주제의 가정사항을 충실히 논리전개하는 한에 있어  
서는 북한의 무력통일정책전략전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도입할수 있었다. 첫째는 북한적 상황파악이 그러하고 둘째는 북  
한적 상황설정을 결정적으로 조건부여하는 한반도 주변관계세력국가군  
의 기본자세에서 「무력남침통일」의 불가능성을 지조하는 결론이  
얻어졌다.

북한의 경우에 보면, 비록 무력통일을 위한 총체적·군사적 저  
력이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력통일정책의 계속적 시도는 결  
과적으로 북한자체의 군비비지출을 위한 국민경제부담상의 출신이  
각중할뿐 아니라, 전쟁사태의 확대발전은 결국 휴전후 공산계국으  
부터의 원조와 북한자체의 피땀으로 이룩해온 경제적 전후복구  
대소중요산업시설이 일시에 갓터미로 화해버릴 가능성이 제산될  
이기에 이 대내적 조건때문에 무력통일정책의 전략전개는 불가  
하고 결론하였다.

한편 한반도외적 상황으로 보아서는 국제제국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보장문제가 초미의 긴급사인 동시에 「건장완화」라는 대세계전략 및 세기적 시대감각의 기본자세때문에 북한의 모험적 무력주의통일정책노선을 철회요청하는 지배적 요소가 개제함으로써 말미암아 북한의 무력통일정책은 불가능한 상황여건속에 놓여 있다는 결론을 도입하였다.

무릇 역사현실의 통찰은 「가정」이란 금물인 것이려니와, 상대방의 사고관념이나 행동방책의 기본「패턴」을 알지못하는 입장에서 가정을 통한 이론적 상합판단밖에 할수 없는 것임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필자만의 소회이기를 바라는 따름이다.